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울산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진철민

전화 052-228-4466

보도자료

2023. 1. 27. (금)

제 목

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간부 2명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의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 공개금지정보

- 울산지검 형사5부(부장검사 노선균)는 부산·울산·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'22. 11. 16. 노조간부 1명을 구속기소하였고,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추가로 오늘(1. 27.) 노조간부 1명을 구속기소하였음
-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하여 노조원 채용 강요,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음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○○(43세, □□노조 부울경건설지부 △△지회장)
- B○○(50세, □□노조 부울경건설지부 △△지회 조직부장)

○ 공소사실 요지

- '21. 8. ~ '22. 7. 부산·울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'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·집단 출근 거부 등 방법으로 공사 중단시키겠다'고 협박하여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및 업무방해 [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, 업무방해]

2

수사 경과

- '22. 10. 27. 검찰, A○○ 구속영장 청구(경찰 신청) / 10. 31. 발부
- '22. 11. 16. A○○ 구속 기소
- '23. 1. 5. 검찰, B○○ 구속영장 청구(경찰 신청) / 1. 9. 발부
- '23. 1. 27. B○○ 구속 기소

3

범행 수법

- 집회 등을 통한 건설업체 압박 및 공사 방해
 - 해당 현장에는 이미 지역민들이 고용되어 있었음에도, '지역민 고용' 등 명목으로 집회 신고 후 실제로는 소속 노조원 채용 요구 관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건설업체를 압박하고, 공사 방해
 - 건설업체 및 원청 상대로 한 전방위적 압박
 - 공사가 중단·지연되는 경우 비용이 급증하는 “시간이 돈”인 공사현장 구조를 악용하여,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‘연대투쟁’¹⁾ 하겠다고 협박
 - 해당 건설업체의 현장 외에도 원청이 시공하는 부·울·경 지역의 다른 공사현장 전체를 중단시키겠다고 압박
 - 공사중단을 우려한 건설업체로 하여금 기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, □□ 노조 소속 노조원을 채용한다는 합의서 작성 강요
- ※ A○○은 폭력조직 △△△파에서 활동한 자로 폭력 전과 다수 있고, B○○은 동종 채용 강요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임

1)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건설업체의 당해 공사현장(울산 ○○현장)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(부산 ○○현장)의 철골, 레미콘 등 필수공정업무를 하는 □□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집단 출근 거부시켜 그 이후 공정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중단시키는 방법

○ 불공평한 일자리 분배를 통한 이권 독점

-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좋은 곳은 노조 간부나 그 측근들에게 분배하고, 그 외 공사현장은 일반 노조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소위 '깜깜이' 방식으로 이권 독점

4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○ 건설현장 채용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사범 엄단

- □□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이미 채용된 비노조원을 퇴출시키고, 비노조원에 비하여 최소 20% 이상 단가가 높은 노조원을 고용하도록 강요하여 채용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

※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던 하청업체는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일자리를 잃었음

- 또한 공사 중단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, 높은 단가로 인한 적자 부담가중으로 일부 중소 건설업체를 파산·폐업시켰고,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인상 등 국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졌음

○ 검·경 협업을 통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처

- 검찰은 A○○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요구 등을 통해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찾아내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함

※ □□노조 간부들은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폰, 컴퓨터 등 주요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고, 피해자들을 압박·회유하여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

-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협력하여 노조원 채용 강요,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음 ☑